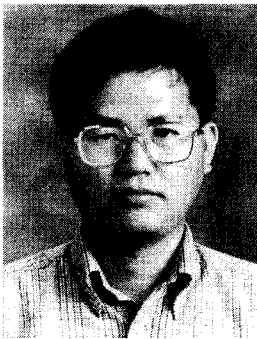


IMF 자금지원 경제하의 주류산업 대응방안



박 형 진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目 次 ■

1. IMF 자금지원의 배경
2. IMF 자금지원과 요구조건
3. 후속조치 및 향후 전망
4. 주류산업의 대응방안

I. IMF 자금지원의 배경

지금 우리는 해방 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전환의 의미를 새기기도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경제적 고비를 맞고 있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금융위기를 맞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 경제의 위상이 추락했으며 모두가 위기감에 싸여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특히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 내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금융부문에의 정치적 개입을 지양하고 정경유착을 끊는 동시에 자유롭되 규칙에 따르는 선진산업국의 관행을 받아 들여 투명한 금융부문을 확립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지 못한 과오를 범했다. 정부의 역할도 부실했으나 문민정부 이후 자신들은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정부부문의 낙후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일부 대기업과 대기업 옹호자들의 주장도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경제의 합리화는 정부와 기업사이의 합리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의 합리화도 중요

함을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의 치유에 IMF의 요구사항이 옳은 것이라면 비록 외압에 의한 경제의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과감히 시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의 금융위기 전까지 올해 우리의 거시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내수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동안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 성장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4%로 약간 낮아졌다. 수입 감소, 수출 급증으로 2분기부터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3%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신중한 재정 정책으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으로 적자폭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총통화도 인플레이션 억제목표에 맞춰 올해 운용 목표를 약간 밑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상황이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양호한 경제의 이면에 파탄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올 초부터 사상 유례없는 대기업의 부도가 연달아 일어났던 것이 그 첫 번째였다. 높은 부도율은 철강, 자동차등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 경기 사이클 하강에 따른 수익성 악화, 수출가격의 하락 등이 원인이 되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도 한 몫을 했다.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하기 위해 30대 재벌 중 6개가 도산해도 개입하지 않았다.

문제의 다른 한 발단은 재벌들의 부도가 금융부문을 급격히 약화시킨 데서 비롯됐다. 대기업의 연쇄적 부도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9월말까지 32조원으로 급속히 증가된 것이다. 이는 96년말 수치의 두 배가량 규모다. 또 다른 발단은 주식시장의 침체에서 비롯됐다.

주가의 급속한 하락으로 은행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순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취약하여 이러한 사태들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시장원리에 대한 인식과 훈련의 부족, 가격 및 관리위험에 대한 경험 부족, 취약한 은행감독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 금융 기관들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으며, 해외자금 조달이 급속히 위축됐다.

한편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되어 1997년 10월말 현재 그 규모가 3조 9천억원으로서 총여신의 2.9%에 달하였다. 이는 1996년 12월말 부실채권잔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대내적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된 중금사들은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많은 중금사들이 거액의 외화자금을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운용하는 매우 위험하고 비정상적인 만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중금사들의 외화조달 만기구조의 불합리는 외환수급의 불안정과 환율 상승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이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통화위기가 동시에 전개되고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주가가 동반 폭락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아시아 국가 경제전체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회의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자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더욱 하락하게 되었다.

외부 자금조달 상황은 10월 23일의 홍콩 증시폭락과 함께 스탠더드 & 푸어스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10월말 이후 급속히 악화됐다. 신규 외화 자금조달이 실질적으로 중단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단기차입금의 만기 연장도 어려워지기 시작하

었다. 한국은행 보유의 외환이 시중은행 해외 지점의 단기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됨에 따라 총 외환보유고도 급격히 줄어 들은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부분적 대응에 그쳤고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8월25일 외환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대응해 정부는 “한국정부가 한국금융기관의 대외채무를 보증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하지만 정부 보증에 따른 국회에서의 법적인 절차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증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시장신뢰의 상실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제안된 금융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통화정책도 외환시장을 악화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11월 들어 처음에는 이자율을 1~2% 포인트 올렸지만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부문에 미칠 부작용을 의식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었고 이자율이 다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화는 10월말부터 평가절하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시장의 환율결정 기능을 제고하고 환거래의 중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1월19일 일일환율변동폭을 2.5%에서 10%로 확대하고 환율방어개입 중단 방침을 선언했다. 그러나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하락은 계속되어 10월말에서 12월초까지 22%나 절하됐다. 10월말부터 이미 외환수급 사정이 급속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21일까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우리의 외환 포지션은 단기외채의 만기 재연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기관들 때문에 크게 압박을 받았다.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데다가 외국 은행들이 단기 대출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하여 한국 금융 기관들의 상환능력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지점에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제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이런 외환보유고의 유출은 11월에 9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국내 금융 기관들의 단기외채 잔액 감소수치와 비슷한 액수였다. 이와 같은 자본유출로 11월초 가용 외환보유고가 1백50억 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11월말에는 다시 70억 달러(5개월 분의 수입액)까지 고갈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의 움직임은 일찍이 간파한 외국인들이 급격히 자본을 유출해가고 해외 투자자 및 은행들의 거부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심각한 외화차입난이 가중되면서 환율폭등과 외화보유고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 진전은 결국 강도 높은 11.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발표를 초래하였으며 대책발표 이틀 후에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금융, 외환위기의 전개과정은 주로 그것을 야기한 1차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도래하게 된 배경에는 보다 더 근원적인 요인이 있었다. 고비용 정치구조에 뿌리를 둔 정경유착, 외형위주의 기업성장구조와 과다차입에 의한 기업경영, 그리고 금융부문의 낙후와 세계화 추세로 인한 무역 및 금융개방의 가속화에 준비 미비 등이 바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기적이고도 근원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IMF가 우리에게 자금지원을 하면서 개선을 요하는 주요 항목들이 되었다.

2. IMF 자금지원과 요구조건

지난 11월 21일 우리 정부가 IMF에 조속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뒤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난 12월초 IMF이사회로부터 우리 정부의 정책수행에 관한 IMF의 권고안을 받아 들이는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확정 받기에 이르렀다. 그 첫 단계로 지난 12월 18일 55억 달러를 지원 받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총 자금수요가 경상수지 적자 규모, 외채 원리금 상환 규모,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500억-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부족분을 여러 나라로부터 긴급차입제도를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 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200억 달러 수준이고 그 중 단기외채가 6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한 계산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IMF 및 주변국의 지원 약속 규모는 570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다. IMF의 총 지원금 210억 달러 외에 세계은행 100억 달러 및 아시아 개발은행 40억 달러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지원 약속 금액이 포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 강도 높은 이행조건을 요구하며, 요구조건을 제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에는 경제긴축, 금융 및 실물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과 부실화 개선,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체제 구축 등이 포함 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낙후된 금융산업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금융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방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IMF가 요구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윤곽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외환보유고의 확충이다.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외환보유고의 부족이 현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인식에서 이의 개선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다른 거시경제 지표의 조정은 이러한 일차적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의 추진이다. 금융부문의 낙후성과 부실채권 누적은 현 위기의 원인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방확대는 물론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는 기업경영의 비효율성 제거와 정경유착의 고리 단절이다. 한국 경제위기 상황의 원인중 하나로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과도한 차입 경영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개입에 의한 관치금융과 이로 인한 은행의 자율성 저하가 이러한 과도한 차입 경영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보고 이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IMF가 합의한 거시경제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 GDP 성장률은 1998년엔 약 3% 정도로 저하시킨 뒤 1999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대외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되 물가상승률을 5% 또는 그 이하로 안정시키고 1998년 말까지 2개월 이상의 수입을 지탱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상승률 억제와 원화절하 압력 감소에 두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1998년에 5%로 억제하고 원화절하 압력을 줄여 환율안정을 도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적극 대처할 의지가 있음을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서 통화정책은 시장안정을 회복, 유지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즉각 긴축기조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공급된 유동성을 환수하는 한편 시장금리를 급격히 올린 후 시장안정에 필요한 만큼의 고율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고 있다. 자금시장 관리는 환율과 단기금리의 움직임을 지표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일 통화공급을 조절하고 변동 환율제 정책을 유지하되 외환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데에 국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1998년도 예산안을 다소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초에 약간의 흑자가 이루어지도록 짜여져 있었으나 향후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재정부담과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보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18일에 국회를 통과한 1998년도 예산안은 GDP의 0.25% 정도의 흑자가 나도록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예산은 6%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 변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환율상승을 감안하면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할 것이므로 이의 보충을 위해서 GDP의 8.0%정도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약 24조원의 자금을 민간 부문에서 충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정부부문에서 증액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 3조6천억원(GDP의 0.8%)의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을 기존보다 GDP의 0.8% 정도가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와 합하여 GDP의 1.5% 정도가 전보다 더 흑자가 되도록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은 세입과 세출의 양분야에서 찾도록 하고 있다. 가시적인 실행효과를 내고 강력한 재정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을 위해 GDP의 0.5% 정도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원유세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며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경상지출을 줄이며 제한적인 범위내의 자본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량의 예산부족 사태 등의 긴급 사태시에는 간접세율과 특별

세(부가가치세 제외)를 30%까지 올리는 방법과 정부 예비비(GDP의 0.25%)의 사용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포괄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체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 정책 수립, 강력한 시장기능 제고와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의 촉진 등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퇴출 정책은 시스템의 애로를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피하면서 부실 금융기관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실 증금사를 과감히 업무정지 시키고 30일내에 만족할만한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할 것과 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모든 은행들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현재 오너들의 증자나 국내 혹은 외국 기관에 의한 M&A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들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금보장은 현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혼란 없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함을 인정하나 시장원칙을 고양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예금보장제도를 유지하고 그 후에는 소액예금자만을 보호하며 금융 기관들의 분담금만으로 운용되는 상업적인 예금보험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진입 및 퇴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대형금융기관은 회계장부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공인 회계사로 감사 받아야 하며 연 2회 금융기관에 의해 발표되는 부실채권, 자본충실도, 소유구조와 제휴관계 등이 퇴출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금융부문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감독기능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구의 운영을 독립시키고 적합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확립하여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독기구에는 또 필요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즉각적인 퇴출과 경영진 교체, 주주지분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전성 감독을 제외하고 은행들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며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안정을 주입무로 하도록 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1998년 중반부터 외국인에게 은행 자회사와 증권회사 현지 법인의 설립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WTO 양허 계획에 입각한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 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 달리 기존의 계획보다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식매입한도를 확대하고 국내 단기 자금시장상품 및 회사채 매입을 허용하며 각종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은행을 통하여 조달하던 기존 해외차입 방식의 문제점을 불식하고 시장규율을 정립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을 철폐하는 계획을 1998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가 정책금융, 기업과 은행간의 유착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광범위한 금융개혁을 통하여 은행들이 상업적인 목적의 대출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요구

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과 자본시장 규제완화로 향후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기업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의 대폭 완화,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채택, 독립된 외부감사 강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업공시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법원결정에 달려 있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고 부담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하며 개인 직업소개소와 일시적인 고용알선기관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급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약간의 보완이 가능하더라도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3. 후속조치 및 향후 전망

표에 제시된 수치는 IMF와 합의된 거시 경제목표를 나타낸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시행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된 수치가 향후의 목표치에 불과하며 이 수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IMF가 요구

〈IMF 프로그램시의 전망〉

(단위 : %, 억불)

	'97년	'98년	'99년
경제성장	6.0	3.0	5.6
물가상승률	4.3	5.0	4.6
경상수지	-135	-43	-21
(GDP 비율)	(-3.0)	(-1.0)	(-0.5)

하는 경제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채 상환에 있다. 현재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3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목표치를 추구하는 것이 최적이 될 것이라는 제안에 불과하다.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곧 환수될 것이며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당분간 고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금리로 우선은 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주식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나 물가가 안정되어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개방 확대조치가 병행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 저리 자금 이용기회가 확대되어 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금리안정이 차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예산보다 GDP의 1.5% 정도 더 흑자가 나도록 운영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 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세수면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 및 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 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등이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거나 향후 이루어질 전망이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지출의 삭감,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우선 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의 통

과에 대해서는 12월 22일 통과 시키기로 이미 대선 전에 3당이 합의한 바 있다.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두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통화관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 폐지, 재정원장관의 의안제안권, 회의소집권, 업무검사권 및 정관변경승인권 등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은행,증권,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재정경제원으로 다원화,분권화 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신규 입법 또는 기존법의 개정을 통하여 결합재무제표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또는 30% 이상 소유하되 최대 주주인 경우에 종속기업의 거래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간 형식적 지배관계만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 중심으로 실질적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와 경영 행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의 출자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하나의 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14개 부실종금사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시킨 바 있고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일괄 매입

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현재 1998년 1월말까지 부실채권의 50%를 매입기로 한 당초의 계획보다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의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11월 2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예금원리금전액을 보호한 후 2001년 1월 1일부터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도록 조치되었다.

은행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은행은 BI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BIS자기자본 비율은 총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은 8% 이상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1997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9%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는 기아, 진로, 대농 등 대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주식시장 침체, 환율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 결산 시에 BIS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은 이를 제고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높이려는 은행들의 행동으로 자금 경색이 가중된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의 투명한 공시를 통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수용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이 확정·공표된 바 있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기준 사전 공시 및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자금조달방안, 금융권별 정리내역,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정기적 공시가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국제기준에 맞는 회계기준 설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부문의 개방계획과 관련해서는 은행부

문에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기존 은행과의 합작, 신규합작 및 현지법인 설립허용을 당초 일정한 1998년 12월보다 앞당겨 허용하기로 발표하였고 증권부문에서도 기존 국내증권사와의 M&A 등을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는 즉시 외국인에게 허용하기로 했으며 현지법인 설립허용은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1998년 중반까지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WTO 양허 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즉,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관련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이 1998년말까지 폐지될 예정이고, 수입승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수입제한품목은 쇠고기 관련 8개 품목과 긴급 수입제한품목인 모조분유 4개 품목인바 이는 이미 WTO에 통보하여 용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와 관련해서는 1997년 11월 현재 11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매년 상, 하반기 2차례씩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1999년말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자본시장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 중 다음 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졌거나 향후 조기 실시할 예정에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이미 50%까지 조기 허용 확대되었고 곧 5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내은행 주식 획득은 현행법상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단기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외수증권 등을 통한 CP 등의 매입이 허용되어 있다.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는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감안하여 개방시기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채권시장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무보증 CB와 대기업 무보증 CB 및 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시장은 이미 1997년 중반에 개방된 바 있고 대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및 만기 3년 이상 보증회사채 및 전환사채는 최근에 개방되었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율은 OECD에 제출한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은 시설재도입용 및 SOC 사업용의 경우 이미 허용되어 있고 현금차관 등은 제한되어 있으나 1998년 1월중에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 한도가 폐지되고 용자비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사, 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채무재표의 공표 등을 의무화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기업자금 조달의 은행차입 비중 축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본시장 육성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능의 강화방안으로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사업장을 확대하여 실업급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기존의 휴업, 인력재배치, 직업전환훈련지원 등 6개 프로그램 외에 근로시간단축지원, 장기 실직자 채용지원

등 5개 지원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현재 불법인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4. 주류산업의 대응방안

IMF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노력을 경주할 경우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나 그 이후에는 점차 회복되어 중기적으로 6.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하락에 따라 내년도 실업률의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1999년부터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실업률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적자규모가 계속 축소되다가 2000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내년도에는 그 동안의 환율절하 효과로 인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에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IMF 프로그램에 따른 경우 내년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향후 수개월간의 단기 전망이다. 긴축경제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경색, 이자율 상승, 외환 부족에 따른 환율 상승, 투기적 요인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 등이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의 해결고리의 시작은 외화의 유입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차입을 연속적으로 갚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외국은행의 만기 연장 승락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IMF 자금지원이 시작되기도 그들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이행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반응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IMF의 자금지원 개시는 문제 해결의 마무리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내의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해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IMF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또다시 외국의 민간 금융 기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영국,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등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 받았던 나라들의 경험을 보아도 모두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중이나 태국은 진행상황이 불투명하며 브라질의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경제 회생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IMF 협상 내용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장 원리 존중과 과감한 개방의 경제정책을 펼 것을 선언한 바 있고 경제의 각 주체가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여 장기적인 안정성장의 궤도에 재진입할 의지를 확연히 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의 전망을 밝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산업도 향후의 대응방안으로서 장기적 방향의 추세에 바탕을 두고 단기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경제의 일반적 필요성과 조화를 이룬 주류산업 개별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단기적 이익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류산업이 내수위주의 산업이라는 점, 그동안 수입품과의 경쟁이 점점 심해져 왔다는 점, 수출

산업으로서 막 발돋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모든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주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와 환율의 움직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는 전반적인 경기하강의 지속, 물가불안 등과 함께 금융 및 실물경제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증가, 임금억제, 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침체가 예상되며 환율은 대외신뢰도가 회복될 때까지 외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IMF 자금지원 등의 외화공급이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고도 충분히 남는 정도가 되지 못할 것이므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주류산업은 수출위주의 전략과 국산주류 소비비중 증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대응방안을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 고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 회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과감한 수출드라이브 전략을 추구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고환율은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주류에 대한 수요를 진작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국산주류 소비비중 제고 전략을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다. 경제 성장을 둔화와 소비위축에 따른 주류 소비의 감소요인이 바로 그것인데 주류산업이 내수 위주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앞의 긍정적인 효과를 앞지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감안하여 주류산업은 수출위주의 전략과 수입품과의 경쟁 강화를 통하여 소비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최대한으로 만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산품 애용의 일반적 분위기를 적절히 이용하여 국산주류 소비 비중을 제고 시키

는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단기적인 환율 상승에 의한 수익성 향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외국산 주류와 다시 경쟁할 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 년이 지나면 지금의 고회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시장개방의 확대추세로 인한 경쟁은 과거보다 더 치열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장 전략의 좋은 예로서는 1980년대 초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내 진출 경험을 들 수 있다. 당시 오일쇼크로 인한 미국내 소비자의 소형차 선호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 때 일본 자동차업체는 무결함-무고장의 차 생산에 역점을 두어 미국의 소비자를 일본차 선호에 붙들어 매놓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급격히 증가한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금까지도 일본에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수 선호의 분위기를 이용하되 단기적인 수익성 제고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고 소비자를 장기적으로 국산 주류 선호에 고착시킬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좋은 예이다.

다음은 일반적인 기업 대응 방안으로서 주류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우선, IMF 여신 규제강화와 기업의 수익성 저하에 대처하여 한계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하여야 한다. 한계사업의 유지는 기업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투자를 할 때에는 철저한 타당성 분석이 앞서야 한다. 제조원가 및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전망이므로 수익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재무비율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최근의 연쇄부도사태에서 보듯이 과도한 차입경영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주식형 채권의 발행을 늘림으로써 재무비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차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향후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한 대출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므로 주식이나 회사채 등 직접금융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과 함께 해외자금조달의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 차입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도입하기 위한 대외신인도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의 신인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국내 대기업과 연계하여 각종 수출관련 금융의 활용 등 자구노력을 배가 시켜야 한다.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 최근의 부도사태가 단기 유동성 부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경제여건상 단기적으로는 자금조달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회계지표상의 수익성 뿐 아니라 양호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활용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감량경영을 통하여 경기침체의 가능성에도 대응해야 하며 신인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능력 위주의 인력활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영기법도 선진화해야 한다. 자산 및 부채의 종합관리와 위험관리체제를 도입하여 환율 및 금리 변동성 증대에 따른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회계정보시스템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실적 결과와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가관리체제에 활동기준원가와 목표원가를 도입하여 프로젝트 및 제품의 수익

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수주관리와 판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전환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연

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부실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맞추어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사외 이사제 도입, 기업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투자자와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Freedom is the oxygen without which science cannot breathe.

자유란 산소와 같아서, 그것이 없으면 과학도 숨 쉴 수가 없다.

- David Sarnoff -